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¹⁾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jymoon@kiep.go.kr)



1. 서론

2020년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신기후체제 시작의 원년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취임한 국제기구의 수장들은²⁾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파리기후협정 합의에 따라 보다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방안(NDC)를 재갱신하여 2020년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 내에서 탄소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일명 ‘탄소중립’)를 설정하고,³⁾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⁴⁾ 또한 2020년 1월에는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가 발표되었다. 탄소국경세 개념의 메커니즘 도입과 그린딜 달성을 위한 녹색투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국제 교역 및 기후변화 관련 투자에 있어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그린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럽그린딜의 주요 내용

가. 개관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990~2018년 기간 중 EU는 경제규모가 61%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을 약 23% 감축하였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⁵⁾

이에 EU 집행위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을 목표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고,⁶⁾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의 계획을 유럽 그린딜에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2030년에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고, 기후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하며,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이 EU와 비슷한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또는 EU 역내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U 집행위는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일명, ‘탄소국경세’)도 고려하고 있다.

1) 본고는 문진영 외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2)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19.10 취임) 및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19.11 취임) 등.

3) European Commission(2018), A Clean Planet for all - A European strategic long-term vision for a prosperous, modern, competitive and climate neutral economy, COM(2018) 773.

4) European Commission(2019),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5) △대기오염에 따라 연간 40만 명의 유아 사망 △폭염으로 인해 연간 9만 명 사망 △기온상승에 따라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 14% 증가 △EU 남부지역에 40% 물부족 현상 직면 △매년 홍수위험에 50만 명 노출 △매년 해안침식 위험에 220만 명 노출 △전 세계 기온이 3도 상승할 경우 1,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 △ 2050년까지 식료품 가격 20% 상승 △폭염에 따른 사망으로 연간 400억 유로 비용 발생: European Commission(2019), “What if we do not act?”

6) European Commission(2019),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

나. 분야별 주요 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4개 분야(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와 친환경 농식품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주요 정책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청정에너지]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2021년 6월까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회원국들은 2023년 국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계획을 개선할 때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유럽에너지망(TEN-E)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정이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과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산업]

산업경쟁력과 녹색경제 간 연계성을 감안해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산업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U의 재활용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EU 집행위는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EU 집행위는 새로운 EU 산업정책과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실행계획은 에너지 집적산업(예를 들면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 등)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건축]

건축부문이 에너지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관련한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0년 중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고,⁷⁾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 건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④ [지속가능한 수송]

온실가스 감축에 중요한 수송 분야의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2050년까지 배출량의 90% 감축할 계획으로 EU 집행위는 2020년 중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을 마련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종료하고, 해운부문의 EU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편입과 함께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배출권(EUA)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차량 및 커넥티드 차량과 같은 다양한 수송수단의 개발은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을

7) European Union(2010), Directive on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8) 다양한 수송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수송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

9) European Union(2014), Directive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European Union(2013), Regulation on Union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and repealing Decision No 661/2010/EU.

필요로 하며,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Mobility as a Service(MaaS)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까지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1,300만 대를 위한 공공 충전시설 100만 개 설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연료인프라 지침과 유럽교통망(TEN-T) 규정을 새로 검토할 예정이다.⁹⁾

⑤ [농식품]

EU 집행위는 농식품 분야의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Farm to Fork’ 전략을 제안하였다. EU 집행위는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최소 40% 및 해양어업기금의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회원국들의 국별 농업전략이 유럽 그린딜과 ‘Farm to Fork’ 전략의 목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Farm to Fork’ 전략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하는바, 식품처리 및 소매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를 독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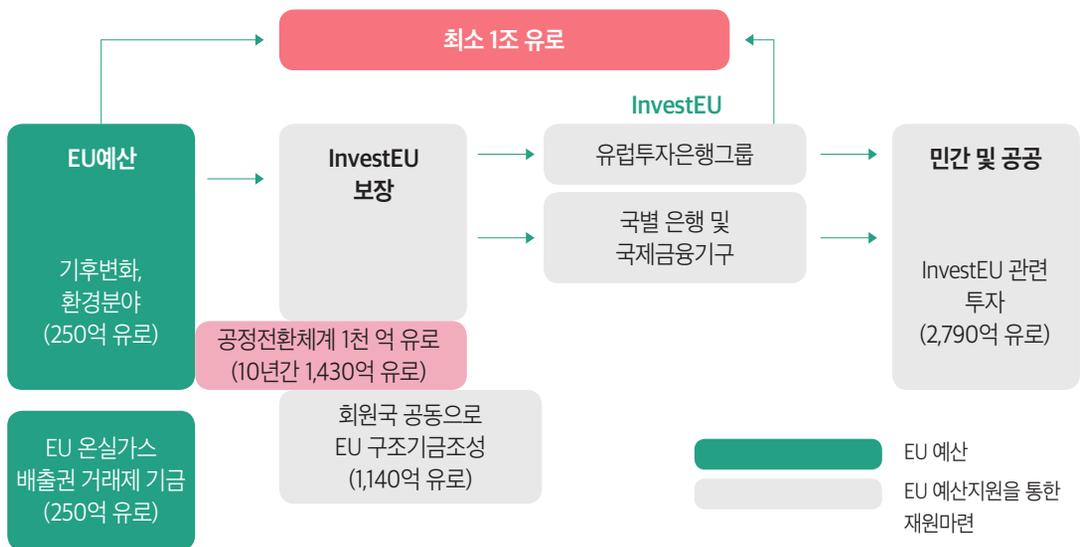
⑥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20년에 생물다양성 전략을, 2021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며,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EU 산림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산림 조성, 산림 보존 및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다. 재원조성 및 투자계획

EU 집행위는 그린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으로 2020년 1월 발표한 그린딜 투자계획(EGDIP: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유럽 그린딜에서 추진하려는 프로젝트

그림 1 유럽그린딜 재원 조성 계획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분야 정부간 또는 협회간 회의 등을 통해 사전 정보 획득 및 공유, 필요 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EU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거버넌스(ESG)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 활동이 강화되고,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도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과 투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모 화학기업이 2050 탄소중립성장을 선언하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전략을 발표한 것도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기업 및 금융업계에서는 환경 등에 대한 고려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과 투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및 투자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EU 및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ESG를 고려한 투자와 관련 정보 공시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송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하여 특히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경우에도 EU의 사례가 주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 딜' 발표 이후 EU의 관련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지역별 현지진출 및 협력전략 마련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송 분야 중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주목하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협력전략 마련 역시 중요하다.

넷째, 향후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전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며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흐름에 부응하고 있지만,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향후 EU가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에 파급될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